



##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A review of defamilialisation for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

저자  
(Authors) 윤성호  
Yoon Seong-Ho

출처  
(Source) [비판사회정책, \(26\)](#), 2008.8, 125-161 (37 pag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26\)](#), 2008.8, 125-161 (37 pages)

발행처  
(Publisher)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160734>

APA Style 윤성호 (2008).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비판사회정책, (26), 125-161.

이용정보  
(Accessed) 동양대학교  
203.232.32.\*\*\*  
2017/03/14 17:0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sup>1)</sup>

윤성호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을 보완하여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시장 관계에 가족을 통합하도록 하고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켰다.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부모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부담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탈가족화) 것은 경

1) 이 연구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제적 부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가게 (혹은 가정에 머물게) 하는(가족화) 것은 보살핌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결국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탈가족화, 가족화, 돌봄, 부모권, 노동권

# 1 문제제기

복지국가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질병,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추구하였다. 한편,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 여성은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여겨졌고 여전히 가족 내 돌봄을 담당해야 했다<sup>2)</sup>.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일부 덜었을지 모르지만 돌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해 왔다(Knijin & Kremer, 1997). 곧 탈상품화란 가족 내 자녀양육자인 여성이 복지국가에 대해 갖는 이해(interests)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노동자의 이해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O'Connor, 1993; Orloff, 1993, 1996; Daly, 1994; Sainsbury, 1996). 페미니스트들은 이처럼 탈상품화 개념이 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탈상품화 개념을 젠더가 포함된 다른 개념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탈가족화(de-familialisation) 개념이다.

맥로린과 글렌딩닝(McLaughlin & Glendinning, 1994)은 국가(또는 시장)가 가족 내 책임과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돌봄수행자인 여성

2) 복지국가의 정책들은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과 보살핌 노동자를 위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Boje & Leira, 2001)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들은 좀 더 보편적이고 높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사회정책이 성별 노동분업에 따른 시민권에 기초해 제공됨으로써 남성들은 임금노동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보살핌에 근거한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으므로 보살핌 제공자로 재규정되어 버린다고 한다(유해미, 2003).

의 노동시장 참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하기 위해 탈가족화를 언급하였다. 탈가족화에 대해서 먼저, 리스터(Lister, 1994)는 개인이 가족관계와 독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강희경, 2007에서 재인용). 이후 탈가족화는 복지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정도(Esping-Andersen, 1999; Korpi, 2000), 또는 복지국가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쉽게 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곤 했다(Taylor-Gooby, 1996; Bamba, 2004에서 재인용). 탈가족화 개념의 등장으로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탈상품화 개념을 보완하여 국가-시장 관계에 가족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탈가족화 개념은 바로 양육의 방식과 양육참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탈가족화 개념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성 과 동일하게 유급노동을 담당할 것을 요구 받는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3)</sup>. 그 이유는 먼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복지국가의 지출 감소로 인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하락 등의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가족정책이 배우자 상호간의 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시하며 특히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 구체적인 양육 방식과 양육참여에 정책이 개입하고 있으므로(Daly, 2004)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여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탈가족화 개념은 복지국가 유형화와 사회정책의 비교를 위한 연구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Bamba, 2007).

또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채 돌봄 제공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고<sup>4)</sup>, 남성의 생계 부양은 약화된 반면 이인생계부양이 크게 증가한 것도 탈가족화 개념이 중요해진 이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재생산은 여전히 여성이 부담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었다(Knijin & Kremer, 1997). 이것은 생애고용(life time employment)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모성(motherhood)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에게(Esping-Andersen, 2002)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돌봄 간의 선택과 조화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인생계부양이 증가함에 따라 일하는 부·모가 자녀 돌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다룬다. 결국 부모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와 자녀 돌봄의 선택과 조화뿐만 아니라 남성의 유급노동 참여와 자녀 돌봄의 선택과 조화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의 탈가족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탈가족화, 가족화, 탈상품화, 상품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윤홍식, 2005; 2006b; 2007; 김수정, 2006; 강희경, 2007), 탈가족화 정책들이 실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분석(윤홍식, 2006a<sup>5)</sup>; 2006b; 마경희 · 이재경, 2007; 김영미, 2007) 등이

4)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핵가족화와 출산을 저하에 따른 가족부담의 감소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의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강이수 · 신경아, 2001).

5) 이 연구에서 윤홍식은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이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와 돌봄 부담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데 반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편적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역할이라는 성통합적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탈가족화의 논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탈가족화 개념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거나 실재하는 정책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 데에는, 하나의 정책은 의도하는 목표 외에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Schleutker, 2006) 간과했고, 상품화를 위한 전제로 탈가족화를 이해한 것(Esping-Andersen, 1999) 등 이들 개념들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이해한 데에 있었던 것 같다. 탈가족화 개념은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돌봄의 선택과 조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혼란을 극복하고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중요시하고 정책의 목표로 강조했던 이전의 탈가족화 개념을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 각각의 노동권(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과 부모권(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의 양립을 위해 새롭게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인생계부양이 보편화되어가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주목 받는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탈상품화 개념과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살펴본 뒤, 이어서 탈가족화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그동안 제시된 탈가족화 개념에 대해 평가한 뒤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탈가족화 개념은 노동시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돌봄 간의 선택과 조화, 양육의 방식과 양육참여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탈가족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노동시장과 가

---

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족의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복지국가  
의 가족정책을 모색하는 데 최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 2 페미니스트들의 탈상품화 비판과 탈가족화 논의

### 1. 페미니스트들의 탈상품화 비판

복지국가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탈상품화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탈상품화가 개인 혹은 가족이 시장 및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달성하는지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개념은 마샬(Marshall)의 사회권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자본주의의 상품화 논리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을 기초로 둔다<sup>6)</sup>.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위한 권리, 사회적 유산을 완전하게 공유할 권리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따른 문화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Marshall, 1950; Lister, 2003에서 재인용). 에스핑 안데르센은 시장에 맞서 개인의 지위를 탈상품화하는 것을 사회권 확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탈상품화를, “개인 혹은 가족이 시장활동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

6) 탈상품화 개념을 처음 제시한 폴라니(Polanyi, 1948)에 이어 오페(Offe, 1972; 1984)는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과 시장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행한 모순적 역할, 즉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에 대해 연구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상품화’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정책을 탈상품화로 구분했다(Esping-Andersen, 1990).

게 하는 정도”로서 연령, 건강, 가족의 지위, 취업 가능성에 관계없이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한다(Esping-Andersen, 1990).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의 참여와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현금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라고 하는 것은 노동 외의 여러 활동, 예를 들어 양육과 가족 의무, 재교육, 조직활동 그리고 여가 등을 추구하면서도 수입이 보장되고 생활수준 면에서 복지수혜자의 지위가 장기간 동안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진정한 탈상품화”(truly de-commodification)라고 한다(Esping-Andersen, 1999)<sup>7)</sup>.

지금까지 살펴본 탈상품화 개념은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1980년대까지 복지국가 연구들은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구조만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사회권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교육, 사회적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 개념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서 사회권의 발달과 복지국가 유형의 관계를 설명하는 탈상품화 개념은 ‘개인’의 사회권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Sainsbury, 1996: 88; 강희경, 2007에서 재인용) 사회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Sainsbury, 1999). 그리고 단위와 주체를 둘러싼 몇 가지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체제의 특성을 구분하는 유용한 준거가 된다는(윤홍식, 2007) 장점을 갖는다.

7) ‘진정한 탈상품화’와 관련하여 윤홍식(2006b)은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 것은 탈상품화가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목적적인 활동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젠더 차원을 복지체제 분석에 통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도 탈상품화 개념에 주목했지만 사회권의 단위로서 기혼여성의 삶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권은 '개인' 범주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기혼여성은 완전한 의미의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존재해 왔다. 여성은 가사일과 돌봄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고 탈상품화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노동권 획득을 통한 상품화의 실현에 제약을 받았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도 여성 개인의 지위보다는 가족 내의 지위로서 부여받음으로써 여성은 온전한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송다영, 200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젠더시각을 통해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의 비판의 핵심은 복지국가는 남성을 주요한 대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및 이론적 시각조차 남성 편향적이어서 여성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루이스(Lewis, 1992)에 따르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때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석에서 사라지며, 그렇기 때문에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임금노동과 무임노동 그리고 복지의 상호관계를 분석에서 빠트렸다고 한다.

특히,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첫째 '시장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유급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트타임 노동과 같은 불완전한 고용상태에 있는 대다수 여성의 경험이 배제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탈상품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상품화는 개인의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상품화된 개인(주로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여성

들은 상품화되지 않았으므로 탈상품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sup>8)</sup>, 고용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면 탈상품화에 완전히 관련되지 못한다(Daly, 1994). 복지국가가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화시켜야만 여성들에게도 탈상품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1999: 44). 결국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들의 비시장노동, 무급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Orloff, 1993; 1999; Daly, 1994; Sainsbury, 1994; 1996). 그래서 여성은 남성 또는 복지국가에 의존하는 존재로 이해되지만 같은 상황에서 남성은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탈상품화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Nyberg, 2002).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화된 복지국가는 가족임금과 성별분업을 전제로, 즉 생계부양자인 남성 노동자의 가족임금과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가족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조건이 노동자의 실제 가족생활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었다<sup>9)</sup>.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유급노동과 무급 가사노동 중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그들은 가정에 머무르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가사노동과 유급노동을 병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강희경, 2007).

둘째,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8) 데일리(Daly, 1994)는 탈상품화가 단순히 소득만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지 수급자격과 규칙의 틀을 포함하는 권리 개념이라고 한다.

9) 가족임금과 성별분업이라는 복지제도의 전제조건은 개별 가족에 강요되는 사회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한다(Barret, 1989; 박숙자 외 편, 1995에서 재인용).

이것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Sainsbury, 1994). 모든 개인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일정 정도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과 가족을 경제와 사회의 단위로 하여 가족구성원은 임금노동자인 남성을 통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매우 다르다(전병유 외, 2004). 여성은 유급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가사노동을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유급노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임금의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탈상품화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돌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권에 기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탈상품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강희경, 2007).

요컨대, 탈상품화 개념은 이미 성별화된 현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특히 여성의 경험을 주목하지 못하여 결국 남성노동자의 탈상품화만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다(이혜경 · 홍승아, 2003). 여성들의 요구는 주로 가사 및 보살핌 노동 등 가족이나 결혼에서 파생되는 역할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요구는 임금노동에 기초하고 있다(Gordon, 1990). 그러나 탈상품화 개념은 남성의 상품화가 가능한 것이 여성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돌봄 노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복지혜택의 근거가 젠더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젠더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마경희, 2004).

한편, 탈상품화를 주요한 기준으로 하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도 계급불평등의 측면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복지국가

유형화의 차원이 국가·시장의 관계로 한정되어(Daly, 1994) 복지지출의 증가,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통한 탈상품화 효과, 시민권의 확대 등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킨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 노동과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Knijin & Kremer, 1997). 가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족과 국가 간의 노동분업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Orloff, 1993).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여러 제도를 통해 가족간의 불평등과 계급간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구성원간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Korpi, 2000).

## 2. 젠더평등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탈가족화의 개념은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 유래한다(Lister, 1988; Bamba, 2004 에서 재인용). 페미니스트들은 탈상품화 개념으로는 젠더를 통합한 분석틀을 만들 수 없으며 이를 젠더적 시각에서 다른 개념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탈가족화의 개념을 가족관계의 유형과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권리를 재편하는 뜻으로 사용한다(Sainsbury, 1996). 여성이 타인을 돌보도록 요구받고, 무급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의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적 권리획득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Lister, 1990) 탈상품화 개념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의 척도가 되려면 탈가족화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리스터가 주장하는 탈가족화는 성인인 개인이

가족관계, 즉 결혼지위와 가족 내 무급 보살핌노동 제공에 관계없이 시장의 유급노동이나 국가의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Lister, 1994). 이혼, 사별, 비혼 등 결혼지위에 따라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돌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존재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가 달라진다면 이는 탈가족화 정도가 낮은 것이다(류연규, 2005). 리스터는 특히 복지국가 소득보장제도에서 결혼지위에 따라 여성의 급여 자격이나 수준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고, 급여의 개별 수급권이 탈가족화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돌봄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을 강조하는 두 측면이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돌봄으로부터의 자유(탈가족화)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유(탈상품화)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인데(유해미, 2003), 여기에서 탈가족화는 여성들이 맡고 있는 일과 돌봄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권을 평가하는 한 지표가 된다고 한다(강희경, 2007).

세인스베리(Sainsbury)는 여성들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결혼관계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여성이 결혼과 관계없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탈가족화)으로 탈상품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한다. 그는 탈가족화는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 지위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수급권을 확보할 때 달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수급자격이 시민권에 근거하면 결혼의 중요성은 약화되며,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고 탈가족화가 이루어진다(Sainsbury, 1996)<sup>10)</sup>.

이 외에도 탈가족화를 논의한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올로프(Orloff)는 탈상품화 개념에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와 여성이 독자적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sup>. 올로프가 강조하는 유급노동 참여와, 여성이 독자적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탈상품화가 남성노동자들에게 잠재적인 억압관계로부터 자율성을 주는 것과 같이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한다(Orloff, 1993). 오코너(O'Connor)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의존이나 국가에 대한 공적 의존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자율성 개념으로 탈상품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Connor, 1993; 마경희, 2005에서 재인용). 르위스는 지금까지 여성의 권리는 임금노동에 속하지 않고 보살핌 노동에 기반을 두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권리는 “보살핌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시민권에 탈가족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wis, 1997).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의 의의는 탈가족화를 다룸으로써 계급을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던 시민권 개념이 계급뿐만 아니라 젠더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고, 복지국가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시장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시장-가족 관계까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탈가족화에 주목함으로써 공적영역인 유급노동에 머무르던 관심의 폭을 가족 내 보살핌 노동까지 넓히고 유급노

10) 스웨덴의 경우 가족관계와 관계 없이 관대한 생활수준이 제공되어 탈가족화가 이루어진다. 어머니들은 결혼지위와 관계없이 출산수당을 받으며, 결혼지위와 관계없이 유자녀 여성은 모두 가족수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계없이 노령연금과 질병급여를 받을 개인적 권리를 갖고 있다(Sainsbury, 1996).

11) 올로프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성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넘겨주는 정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상대적인 처우, 서비스 요구에 대한 근거, 유급노동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이라는 분석틀을 구조화하였다(Orloff, 1993).

동이 보살핌 노동 또는 무급노동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점이다(Sainsbury, 1996). 하지만 몇 가지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류연규(2005)의 비판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들은 리스터가 제시한 탈가족화의 의미인 복지국가의 탈가족화라는 맥락에서 탈가족화의 의미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협의의 가족정책,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여 탈가족화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그친다. 또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초점을 맞추는 페미니스트들의 탈가족화에 대한 개념화는 가족의 자유라기보다는 가족으로부터의 여성의 자유에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고 한다(Bambra, 2004). 이러한 비판을 고려할 때 페미니스트들의 탈가족화 논의는 탈가족화의 대상을 가족 내 기혼여성으로 제한하게 되고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의 범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3 에스핑 안데르센과 라이라의 탈가족화에 대한 논의

이처럼 주류 복지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물젠더적인 탈상품화 개념이 젠더불평등을 간과한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으며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은 탈가족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여기에서는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과 일-가정 양립의 입장에서 탈가족화를 주장하는 라이라(Leira)를 중심으로 여러 탈가족화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12) 김수정(2006: 6-7)은 탈가족화에 대한 정의와 지표에 대한 논의를 두 가지로 나누

## 1. 가족부담의 감소를 위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가 모든 복지의 책임을 담당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그간 무시해왔던 복지의 공급자로서의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주의(familialism)와 탈가족화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과 가구(household)를 그의 복지국가 분석에 통합시켰다. 그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기 위해 탈가족화 개념을 활용해 국가(또는 시장)가 가족 내에서의 위험과 책임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평가하였다(Woods, 2006: 9). 그가 정의하는 탈가족화는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경감시키는 것, 즉 가족과 관계없이 개인이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으로 사회정책이 여성들을 가족책임의 부담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어머니)이 일을 통해 완전히 독립하려면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탈가족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탈가족화는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상품화될 수 있는 정도로 독립적인 가구의 구성이 가능

---

는데, 첫째 탈가족화의 대상 단위를 가구, 가족으로 보고 가족의 부양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하며, 두 번째 입장은 탈가족화 대상을 여성으로 보고 여성의 남성생계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완화시키고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탈가족화로 정의한다. 전자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현금급여프로그램과 서비스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수당, 세제혜택,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이 탈가족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후자는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와 독립적인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류연규(2005)는 전자를 비용을 보상하는 아동수당과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한 정도를 의미한다(Esping-Andersen, 1999).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가족화 개념이 가족해체와 같은 반가족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가족이 떠맡고 있는 복지과 돌봄의 무거운 책임이 시장이나 국가의 복지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제에 의해 완화되는, 즉 탈가족화되는 것이라고 말한다(Esping-Andersen, 1999). 그러나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저소득층 가구들에게는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결국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복지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류연규(2005)도 탈가족화라는 개념이 시장노동의 상품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나타내는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를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족 내 책임과 노동을 국가가 더 많이 분담할수록 가족주의는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높으면 가족의 책임과 노동이 여전히 가족에 묶이게 되며 탈가족화의 가능성도 제한될 것이다(홍승아, 2005).

이러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의 무급노동 경험을 반영하는 분석틀로서 이전의 탈상품화 논의에서 중요한 진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사회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가족의 복지과 돌봄 책임이 국가 또는 시장에 의해 완화되는 정도로서 여성 노동의 상품화를 위한 전제조건(Esping-Andersen, 1999: 51)”에 초점을 둔다. 이에 대해 우즈(Woods, 2006)는 그의 개념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남성 기준에 기초해 상품화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가와 시장에 의한 복지제공이 곧바로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나아가 여성은 상품

화되고 독립적인 가구구성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개념화는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장지연 외, 2004) 사회권과 연결되는 탈가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탈가족화 논의를 경시하는 것이었다(강희경, 2007).

한편, 류연규(2007)는 탈가족화 개념을 가족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구성원에게 가족 내 관계와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리스터(1994)와 에스핑 안데르센(1999)의 탈가족화 개념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가족의 복지부담이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되려면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급노동과 사회보장 급여에의 접근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탈가족화 개념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일-가족 양립지원, 그리고 급여의 개별수급권 등 3가지 하위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그는 에스핑 안데르센(1999)의 조작화는 가족의 복지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출에 국한된 것인 데 비해 자신의 탈가족화는 가족, 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 부담 완화와 국가급여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이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혹은 지원을 통한 보살핌 노동의 부담 해소가 실제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류연규, 2007: 266)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밤브라(Bambra, 2004)도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존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으로써 탈가족화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한다. 탈가족화의 의미는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

시장 상황까지를 포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정리하면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의 상품화를 목표로 가족의 부담을 더는 것에 주목할 뿐,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빠트리고 있어 복지국가 유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탈가족화는 복지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는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 노력은 여성이 가정 내에서 담당하는 돌봄의 부담을 감소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일하는 부모를 위한 라이라의 탈가족화

지금까지 살펴본 페미니스트들과 에스핑 안데르센, 그리고 그 밖의 여러 탈가족화 논의는 여전히 가족 내 여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성별분업과 남성생계부양을 상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인생계부양가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일하는 부모의 사회권에 초점을 맞춰 탈가족화 개념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14)</sup>. 노동권은 부모가

13) 여기에서 노동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직종분리, 임금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을 가리킨다. 이재인(2006)은 여성들에게 있어 근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보육정책의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먼저 노동시장 내 차별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두는 기회의 평등과 육아휴직, 공보육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의 평등이 있다고 한다.

14) 강희경(2007)은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탈가족화를 논의하는 연구자들을 '일-가정 양립론자'로 호칭하였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에스핑 안데르센의 상품화나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하는 유급노동과 큰 차이가 없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보살핌 노동에 대한 권리인 부모권을 사회권으로 강조한다<sup>15)</sup>.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 노동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부모휴가와 양육수당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여성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라이라(2002)는 자녀양육을 사회권의 요소로서 개념화할 때 양육자가 될 권리와 전업양육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때 양육자가 될 권리가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상품화될 권리를 의미한다면, 전업양육자가 되지 않을 권리는 노동을 상품화할 권리이며,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사회권은 다르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는 부모의 자녀 돌봄권 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의 가족화’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강희경, 2007). 그는 자녀 돌봄이 젠더간에 평등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기존의 어머니의 책임을 아버지의 책임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Leira, 2002), 어머니는 더 이상 자녀를 돌보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가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eira & Saraseno, 2002; Leira, 2004).

라이라는 일하는 부모가 유급노동과 자녀 돌봄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상품화는 임금이나 어떤 형태의 보수를 위해서 노동이 교환되는 것, 탈상품화는 노동 대신에 복지국가로부터 소득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화는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

---

15) 라이라(2004)는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주장하였다.

해서 임금노동을 중단하는 것, 탈가족화는 가족과 부모 외에 기관에 의한 자녀 돌봄 지원을 각각 의미한다고 한다(Leira, 2002). 이처럼 라이라가 사용하는 탈가족화 개념은 페미니스트들의 탈가족화 개념과는 다른 내용을 담는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젠더관점에서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탈가족화를 제시했지만, 라이라는 일하는 부모의 상품화를 위한 탈가족화를 제시하였으며, 리스트가 여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탈가족화를 주장한 것과 달리 라이라는 돌봄의 사회화를 탈가족화로 보았다(강희경, 2007: 17).

윤홍식도 라이라와 비슷한 시각에서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을 함께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에 따르면 에스핑 안데르센이 ‘진정한 탈상품화’를 가리켜,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거나 가족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가족화’라고 개념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가족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 바로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를, 자녀양육 등을 하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개념에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적의식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윤홍식, 2006b). 뿐만 아니라 윤홍식(2007)은 ‘진정한 탈가족화’(truly de-familialization) 개념을 제시하면서 부·모가 임금노동, 재교육, 여가 등을 위해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중단해도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여기서는 아동)이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sup>16)</sup>. 그는 부모가 임금노동을 수행할 권리(노동권)와 아동을 돌볼 권리

16) 강희경(2007)은 윤홍식의 논의가 내용면에서 부·모의 돌봄 노동을 탈가족화시켜 상품화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보다는 에스핑 안데르센에 가깝다고 한다.

(부모권)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논의하는데, 탈상품화/상품화와 탈가족화/가족화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가족정책을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지는 제안을 한다(윤홍식, 2005; 2006a; 2006b; 2007).

윤홍식(2005)은 탈가족화에 대하여, 부모의 돌봄을 탈가족화시켜 상품화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모의 소득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정책과 관련된다고 한다. 여성의 노동이 시장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정책은 탈가족화이면서 상품화이고, 가정에서 부부에 의해 돌봄 노동을 행하게 하는 정책은 탈상품화이면서 가족화 정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충실한 가족정책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부모노동력의 상품화, 즉 부모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 가족 내 돌봄의 욕구를 가족 구성원 외의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충족시킬 때(탈가족화) 가능하다고 한다(윤홍식, 2005). 이러한 인식에 대해 김수정(2006: 8)은 이러한 분류는 탈가족화 = 상품화, 탈상품화 = 가족화의 등식에 기초함으로써 경제적 부양 책임과 돌봄 노동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일-가정 양립론자의 주장은 결혼과 부부관계보다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국가가 자녀의 돌봄 영역에 관여하고,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Leira, 2002). 그들은 페미니스트들과 기본 입장을 공유하지만 구성원간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가족 개념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고 보고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등의 문제를 살피고 있다(강희경, 2007). 이들의 논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상화되고 이인생계부양가구가 늘어나는 오늘날 가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일-가정 양립론자들은 비록 주류 복지국가론자나

페미니스트들보다 분석의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일하는 부모의 시각에서 일-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와 탈상품화, 그리고 탈가족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결정과정에 접목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분석의 초점을 '일하는 부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많은 1인생계부양자 가족이나, 특히 혼자서 유급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가장 취약한 여건에 처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가구를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4 탈가족화 개념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탈가족화 개념은 계급에 관한 논의에 머물던 시민권의 범위를 젠더를 포괄해서 더욱 확대하고 국가-시장 관계에 가족을 포함해 구체화시킨다. 여기에서는 복지국가 논의에 탈가족화 개념을 도입한 것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나이진과 크레머(Knijin & Kremer, 1997)의 주장대로 탈가족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시민권 개념은 유급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보살핌을 받을 권리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권리까지 확장되었다. 탈가족화는 이러한 보살핌과 관련된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복지국가의 시민권 개념을 탈상품화에 한정하여 구체화했을 때 사회정책은 남성인 유급노동자가 주로 겪게 되는 은퇴, 산재, 실업 등의 위험만을 포괄하였으나 탈가족화에 의한 사회적 시민권의 구체화를 통해서 여성 노동자의 사별, 보살핌, 출산 등의 위험도 사회정책에 포함되는 것이다(Daly, 1994).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는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급여 외에도 사회적 서비스를 다루게 되고, 사회적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격에서 개별 여성의 수급권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탈가족화 개념은 몇 가지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첫째, 여성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 중요한 사회정책 단위의 개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김영미, 2007).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여성을 개인이 아닌 가족의 범주에 남겨둔다. 따라서 기혼여성은 여전히 완전한 의미의 개인이 아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들이 개인보다 가족 내 지위에 자격을 부여한다면 탈가족화를 통해서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권 실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탈가족화를 통한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가 여성의 가족 내 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탈가족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받지 못한다(Bambra, 2004). 가족이나 여성의 양육부담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성별분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류연규, 2005). 나아가 가족정책에서 소득보장과 성별분업의 해소가 병행되지 않는 탈가족화는 가족의 시장의존도를 높이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성별분업 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김수정, 2006: 2).

둘째, 탈가족화 개념은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았다.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탈가족화)를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탈상품화의 권리 또한 갖게 된다고 한다(김수정, 2004). 그러나 탈가족화 개념이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그 자체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유급

노동 접근성, 또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장지연 외, 2004). 여성의 유급노동과 유급노동 접근은 여성에게 있어 탈상품화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며(Orloff, 1993), 유급노동 접근과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임금수준이 보장될 때 가족관계나 돌봄 노동 의무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탈가족화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마경희·이재경(2007: 98)은 라이라의 사회권으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성별분화된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성인지적 정책들이 전통적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부모가 모두 경제적 부양자이자 양육자인 평등한 젠더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셋째, 탈가족화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설명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탈가족화는 부·모가 가족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돌봄 대상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윤홍식, 2006b). 그런데 이러한 탈가족화 개념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양립하는 프로그램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up>17)</sup>. 예를 들면, 아동보육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동력을 탈가족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부모휴가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17) 이러한 인식은 윤홍식(2006b)의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었다. 그는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양립 노동시장에서의 탈상품화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18) 에스핑 안데르센(1999)은 임금노동자가 여가를 즐기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해도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탈상품화라고 한다. 이것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를 동반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홍식, 2006b).

〈표 4-1〉 탈가족화로 분류되는 가족정책

연구자	구분	탈가족화	가족화
김수정(2006)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류연규(2006)		아동수당,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Schleutker (2006)		부모휴가	
Michof(2006)		돌봄휴가, 보육서비스 <sup>19)</sup>	모성휴가, 부모휴가, 부성휴가
윤홍식 (2007)	상품화	아동보육(공·사적시설)	아동가정양육수당 <sup>20)</sup>
	탈상품화	부모휴가(스웨덴, 핀란드)	젠더분리 모성/부성휴가, 아버지할당제
			젠더통합 부모휴가

서 노동하는 부·모의 노동력을 가족화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동력을 탈상품화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휴가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탈상품화이지만, 남성이 아동 돌봄에 더 큰 책임을 가지기를 원하여 여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가족 내에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탈가족화라는 주장도 있다(Schleutker, 2006).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윤홍식(2007)의 연구는 아동보육과 부모휴가를 탈가족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아동보육은 상품화로, 부모휴가는 탈상품화로 다시 분류하였다. 김수정(2006)과 류연규(2006)의 연구는 개별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탈가족화 프로그램만을 제시하였는데 육아휴직, 모성휴가, 부성휴가 그리고 아동수당을 탈가족화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19) 미친(2006: 7)은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서로 관련된다고 하는데 그 예로 돌봄휴가(child-caring leave)가 장기간 높은 급여로 제공된다면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20) 노르웨이의 아동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수급조건이 임금노동의 중단이 아닌 공적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공적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화와 탈상품화,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윤홍식, 2007).

〈표 4-2〉 탈가족화 수준 분석에 사용된 지수

연구자	탈가족화 지수	초점
Esping-Andersen (1999)	①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지출 ② 가족수당과 소득공제 ③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④ 가정방문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	여성의 가족책임 부담을 줄이는 정도
류연규 (2005)	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현금급여와 세제혜택) ② 일-가족 양립지원 (출산/육아/부성 휴가제도, 공공보육시설) ③ 공적연금의 개별수급권	가족, 돌봄노동 완화, 국가의 급여에 대한 개별수급
Bambra (2004, 2007)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남성과의 차이) ② 모성휴가 급여 ③ 유급 모성휴가 기간 ④ 여성의 평균임금(남성 대비 비율)	여성의 의존성 감소와 경제적 독립

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이로써 이 연구자들이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미친(Michoń, 2006)은 돌봄휴가와 보육서비스를 탈가족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모성휴가, 부성휴가 그리고 부모휴가를 가족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사용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탈가족화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사용된 탈가족화 지수의 내용에서도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가족화와 가족화 개념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가족의 복지와 돌봄 책임의 완화를 탈가족화로 개념화한 에스핑 안데르센(1999)은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가족 지원을 다 포함하는 탈가족화 지수를 구성하고 있기에 탈가족화를 따로 구분한다고 보기 어렵다. 밤브라(2004)는 여성의 독립성과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의 탈가족화 지수는 모성휴가 기간과 모성휴가 소득대체율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여성노동시장 참여율과, 가족으로부터

터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여줄 수 있는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을 포함시켰다. 그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을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에 관련된 요인들과 모성휴가를 탈가족화 지수로 구성하는 데 돌봄의 주체를 여성만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모성휴가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화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분류하였는데 모성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이 왜 탈가족화 지수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빠트렸다. 마지막으로 류연규(2005)의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지원과 공적연금의 개별수급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모두 들었는데, 역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별 정책에서 탈가족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연구자들조차 구분하지 않거나 확실한 기준 없이 사용하는 실정이다.

## 5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개념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 욕구 증가,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탈산업사회적 현상은 '돌봄 공백'을 만들어 내었으며 새로운 복지수요와 정책의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Taylor-Gooby, 2004). 최근 복지국가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돌봄은 복지체제 내 가족의 위상과 역할, 국가와 가족의 관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 성별에 따른 역할과 자원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의 본질적 속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적 차원이기 때문이다(마경희 · 이재경, 2007: 92).

이처럼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주로 여성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그들의 선호를 좀 더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빈곤을 막기 위한 고용 기회를 증진시켜야 하며 적정 가격의 보육서비스, 유급 부모휴가, 자녀간호를 위한 휴가 등이 중요하다(Esping-Andersen, 2002). 이들 프로그램들은 돌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유급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거나, 유급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곧 탈가족화 개념에 관련된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탈가족화 개념으로는 고도로 유연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라는 새로운 사회복지환경에 놓여 있는 가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입장에서 노동하는 주체인 부 · 모 각각의 노동권(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과 부모권(아동을 돌볼 수 있는 권리)을 보장 · 양립하는 것,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 · 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탈가족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4-3〉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탈가족화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화, 탈상품화, 상품화에 관해서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해 살펴보면, 탈가족화란 사회정책 또는 시장을 통해서 여성의 돌봄 책임이 완화되어 여성이 가족관계나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 ·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9). 따라서 아동양육의 사회화는 가족, 주로 여성에게 지워진 양

〈표 4-3〉 탈가족화 개념의 비교

연구자	탈가족화 수단	탈가족화 방향	초점
페미니스트	유급노동 사회보장 급여(개별수급권)	여성의 적절한 수준의 생활 여성의 자율성	젠더불평등 해소
Esping-Andersen	시장이나 국가의 복지제공	가족의 부담 감소	여성의 상품화
류연규	국가의 제도적 노력	가족구성원의 적절한 생활수준	가족부담 완화
Leira/윤홍식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부모의 상품화
본 연구	보살핌/유급노동 지원	부모권-노동권 양립	돌봄 부담 감소

육 부담의 일부를 탈가족화함으로써 부·모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가족화란 부·모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Leira, 2002; 윤홍식, 2006a; 2006b), 가족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부모휴가, 모성휴가, 부성휴가, 그리고 아동가정양육수당 등이 있다. 일과 돌봄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상품화와 돌봄의 탈가족화, 돌봄의 가족화와 부모노동의 탈상품화가 한 차원에서 조망된다. 자녀양육을 가족화하는 정책은 부모노동을 탈상품화하고, 반대로 자녀 돌봄을 탈가족화하는 정책은 부모노동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강희경, 2007). 정리하면 부·모 노동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탈가족화이면서 상품화정책이고, 돌봄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탈상품화이면서 가족화 정책이다<sup>21)</sup>.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탈가족화(상품화)와 가족화(탈상품화)로 구

21) 라이라는 돌봄급여의 효과와 관련하여 그것이 보육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면 보육은 탈가족화되지만 부모는 상품화되고,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 돌봄 급여는 사실상 돌봄임금이 되면서 부모의 노동을 상품화하지만 탈가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다(Leira, 2002; Leira & Saraseno, 2004).

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명하고 개별정책을 분석하는 것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라는, 가족이 현실에서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유용성이 감소되며 노동권과 부모권의 보장·양립을 함께 고민하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돌봄 부담에 대하여, 여성(예외적으로 남성)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보살피거나 국가 또는 시장을 통해서 보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탈가족화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돌봄 부담의 한 가지 측면, 즉 보살핌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돌봄 부담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것이다. 소득 획득을 위해 가정에서 나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상품화(탈가족화)는 경제적 부양을 위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가는(혹은 가정에 머무는) 탈상품화(가족화)는 보살핌을 위한 것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탈가족화(상품화)와 가족화(탈상품화)는 결국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부양과 보살핌이 모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것이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별 프로그램의 의도가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가족화를 지향하든 그 목표와 결과는 보살핌과 경제적 부양의 부담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고 모두를 탈가족화

로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먼저, 노동시장과 가정을 구분하여 노동 또는 돌봄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는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 부·모 각자가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가지며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담보하는 가족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부·모 각자의 부모권과 노동권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일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1인생계부양가구나 여성가장가구를 포함하는 가족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돌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보살핌과 부양이 부·모 각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젠더평등을 도모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모색하는데 유용한 준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양립정책 등 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개념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

22)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부모휴가 등은 탈가족화가 아니며 가족화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재가족화(refamilialization)라고 명명하여 탈가족화와 구분한다(류연규, 2005: 17). 한편, 류연규(2005)는 휴가제도와 보육시설을 구분 없이 탈가족화로 조작화하였다.

## 참고문헌

- 강화경(2007).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9(1), pp.1-27.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pp.209-233.
- \_\_\_\_\_(2006).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18(4), pp.1-33.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제도적 지원의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류연규(2005). “복지국가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_\_\_\_\_(2007).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0, pp.259-286.
- 마경희(2005). “사회권으로서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여성과 사회』 16, pp.35-66.
- 마경희 · 이재경(2007).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pp.91-116.
-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 pp.231-254.
- 유해미(2003). “아동양육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스웨덴사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3, pp.9-44.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pp.291-319.
- \_\_\_\_\_(2006a). “부모 · 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개발협력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pp.223-249.
- \_\_\_\_\_(2006b). “OECD 21개 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서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보육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pp.341-370.
- \_\_\_\_\_(2007). “노르딕 4개 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pp.327-354.
-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18(2), pp.67-88.
- 이혜경 · 홍승아(2003). “성통합적 복지국가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사회보장연구』 19(1), pp.161-189.
- 장지연(2004).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38(3), pp.177-200.
- 장지연 · 정혜선 · 류임랑 · 김수영 · 장은숙(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 장지연 · 박찬임(2004).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 여성부.

홍승아(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 18개 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Bambra, C. (2004). “The worlds of welfare: illusory and gender blind?”, *Social policy and Society* 3(3), pp.201-211.
- \_\_\_\_\_. (2007). “Defamilisation and welfare state regime: a cluste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 pp.326-338.
- Daly, M. (1994). “Comparing welfare states: Towards a gender friendly approach”, in D. Sainsbury(ed.),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A new gender contract” pp.68-95. in Esping-Andersen, G. Duncan, A. Hemerijck and J. Myles(ed.),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L. (1990). “The new scholarship on the welfare state”, pp.9-36, in L. Gordon(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Wisconsin University Press.
- Hobson, B. & D. Morgan (2002). “Introduction: making men into fathers”, pp.1-24, in B. Hobson(ed.), *Making men into fathers: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ijin, T. & M. Kremer (1997). “Gender and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s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3), pp.182-185.
- Korpi, W.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7(2), pp.127-191.
- Leria, A. (2000). “Combining work and family: Nordic policy reforms in the 1990s”, pp.157-174, in Boje, T. and A. Leria(ed.),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Routledge.
- \_\_\_\_\_.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C. Saraceno (2002). “Care: Actors, relationships and contexts”, pp.55-83, in J. Lewis Edward Elgar and B. Siim(ed.), *Contested concepts in gender and social politics*.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pp.159-173.
- \_\_\_\_\_. (1993). “Introduction: Women, work, family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pp.1-24, in Lewis, J. Edward Elgar(ed.),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 Lister, R. (2003).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Palgrave.
- McLaughlin, E. and C. Glendinning (1994). “Paying for care in Europe: Is there a feminist approach”, pp.52-69, in Hantrais Linda and Mangen Steen(ed.), *Family policy and the welfare of women*, Cross-National Research Papers, European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Loughborough.
- Michoń, Piotr (2006). “Familisation and defamilisation policy in 22 European countries”,

- 4th Annual ESPAnet Conference.
- Nyberg, A.(2002). "Gender, (de)commodification, economic (in)dependence and autonomous households: the case of Sweden", *Critical Social Policy* 22(1), pp.72-95.
- O'Connor, J. S.(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3), pp.501-518.
- Orloff, A. S.(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pp.303-328.
- \_\_\_\_\_(1996). "Gender in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51-78.
- Sainsbury, D.(1994).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 \_\_\_\_\_(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99).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chleutker, E.(2006). "Is it commodification, de-commodification, familism or de-familialization? Parental leave in Sweden and Finland", *Wirtschaft & Politik Working Paper* Nr.31-2006.
- Taylor-Gooby, P.(2004). "New risk and social change", pp.1-28, in P. Taylor-Gooby(ed.), *New risk, new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s, D. R.(2006). "Focusing on care: Family policy and problems of analysis", *Wirtschaft & Politik Working Paper* Nr.30-2006.

**A review of defamilialisation for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Yoon, Seong-H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in respect of the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Esping-Andersen's typology of welfare-state has been criticised mostly by feminist authors are looking for alternative criteria to identify models which are 'gender sensitive' i.e. reflects the gender differences due to caring responsibilities. The debate led to introduce a theoretical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which concentrates on the extent to which public policy supports family in its caring function. The traditional family, headed by the male breadwinner, has been replaced by the dual-earner family as the dominant family form. Women's mass entry into the labour market has not resolved the problem of how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Defamilialisation is about what the state(or the market) be less burdened with their care duties. I reviewed the concepts of defamilialisation Feminists, Esping-Andersen, Ryu, Leria and Yoon

used in their studies and newly defined defamilialisation concept. New defamilialisation is focus on undermines burden of care and facilitates pai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Key words: defamilialisation, familialisation, care, labor rights,  
parental right

und2004@chonbuk.ac.kr